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 교류 담당관**

## 〈목 차〉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 태국,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사형 도입 고려 ..... 1](#)
- [□ 루마니아 반부패 시위 계속 ..... 2](#)
- [□ 브라질 부패 스캔들 남미 전역으로 확대 ..... 5](#)
- [□ 프랑스 대선 휩쓰는 후보들의 부패 혐의 ..... 9](#)
- [□ 9억 명 이상의 아시안인 지난해 뇌물 상납 압력 받아 ..... 13](#)
- [□ 러시아 반부패 시위에 수천 명 참여 ..... 15](#)

### II 국제회의 동향

-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18](#)
- [□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 19](#)

### III 옴부즈만 소식

- [□ 영국: 마이클 킹 신임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장 취임 ..... 20](#)
- [□ 호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출생·사망·혼인 신고제도의 결합 드러나 ..... 21](#)
- [□ 스페인: 2016년 옴부즈만 활동 평가 ..... 23](#)
- [□ 케냐: 옴부즈만 개입으로 병원 계약직 400명 정규직 전환 ..... 27](#)
- [□ 영국: 무료통학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곤란을 겪는 아동 증가 ..... 28](#)
- [□ 아일랜드: 옴부즈만과 의료협회 간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 30](#)

### IV 참고 자료

-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 31](#)
- [□ 2016년 부패인식지수 ..... 34](#)

##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태국,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사형 도입 고려 (The Independent, 2017.1.9)

- 태국 정부에서 부정부패 사건 일부에 대하여 사형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중인 군사정권이 이를 정권 강화에 이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 군사정부에서 임명한 국가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총 10억 바트(약 2,300만 파운드) 이상에 해당하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부 관료는 약물주사를 통한 사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 그보다 적은 액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사형이 실제 채택되기 위해서는 태국 내각과 의회,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태국 군사정부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장악했으며, 반대파를 통제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부정부패 처벌을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존 관련법에서도 뇌물수수 유죄판결을 받은 정부 관료에 대하여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까지 뇌물수수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다.
-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태국의 사형 적용 확대 움직임을 비판한 바 있으며, 2015년 해당 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언급하였다.
- 2009년 두 명의 마약 밀매범에 대하여 집행된 사형이 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2009년 이전 6년 동안은 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된 바 없었다.
- 현재 태국에서는 살인, 강간, 방화, 반역죄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다.
- 태국에는 현재 수 백 명의 사형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과밀하고 열악한 환경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 태국 내 사형수에는 십 수 명의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유럽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문기사 : Thailand considers introducing death penalty for corruption(the independent, Jan. 9, 2017)

루마니아 반부패 시위 계속 (Financial Times, 2017.2.9)

**공산주의 몰락 이후 사상 최대 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치인 사퇴 거부**

- 느슨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나이트클럽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루마니아 반정부 시위대는 2015년 ‘부패는 살인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당시 정부를 몰아냈다. 지난 화요일 경미한 부정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후, 반정부 시위대의 슬로건은 한 단어 ‘사퇴하라’로 간단해졌다.
- 어머니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39세의 심리학자 모니카 카잔(Monica Cazan)씨는 “도둑질을 합법화하려고 하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정부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존중이고 현 정부의 사퇴이다”라고 말했다.
- 카잔씨를 포함한 수십만 명이 지난 주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루마니아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로 인해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루마니아 정부는 수백 명의 부패 관료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기소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행정명령 채택을 포기하게 되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이번 시위는 1989년 공산주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퇴진 시위 이래 루마니아에서 열린 가장 대규모의 시위였다.
- 행정명령 채택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루마니아 집권 정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집권 사회민주당(PSD)의 리비우 드라그네아(Liviu Dragnea) 대표는 ‘적법한 선출 절차를 통하여 취임한 정부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과 같이 경직된 상황이 계속되면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 불가리아에 인접한, EU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루마니아에서 부패 척결 노력은 2007년 EU가입 시 옹호했던 가치에 대한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대 역할을 해 왔다. 루마니아 검찰에서는 48,000 달러 미만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직권 남용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정 부패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지지자들은 문제의 행정명령이 교도소 과밀 해결, 헌법재판소 명령 이행, 행정 신속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참가자 규모가 줄더라도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위원회에서 법치주의 침해를 우려하는 경고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법 개정 시도를 완전히 철회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 지난 12월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압승을 거둔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투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화요일, 요하니스 대통령은 내각이 ‘완벽한 위기상황’을 빚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새로운 총선을 촉구하지는 않았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연설에서 ‘문제 있는 일부 정치인이 아니라 루마니아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제 상황은 루마니아의 반부패청(DNA)에 달려있다. 지난 5년간 반부패청은 두 명의 총리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관료들을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반부패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 반부패청 본부는 흡사 중세시대 성과 같은 모습이다. 120명의 검사들이 쉬지 않고 조사를 벌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스포츠카나 모피코트 뇌물에 얽힌 이야기, 고장난 의료기기를 칠만 다시 해서 재판매한 사건이나 비눗물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시켜 병원에 납품한 사건 등이 밝혀졌다.
- 43세의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이자 검사장이기도 한 로라 코베시(Laura Kovesi, 43) 루마니아 반부패청장은 논란의 행정명령이 ‘반부패청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고 확인했다.
- 지난 해 코베시 청장의 지휘 하에 수백 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인과 적대적인 언론, 해커 등에게서 지나치다는 비난과 함께 반론이 제기되었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는 코베시 청장의 집 밖에서 침실의 모습을 설명하는 영상을 생방송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 코베시 청장은 ‘이러한 공격은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루마니아 국민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반부패청은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고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루마니아 반부패청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형태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의 전 기관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회사 블랙 큐브의 직원 두 명이 코베시 청장의 부친을 공격한 혐의로 지난 12월 부카레스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 코베시 청장은 '이러한 모든 공격 또한 물론 나와 내 동료의 가족에게 까지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시도이다'라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Romania protesters keep up fight against government corruption (FINANCIAL TIMES, Feb. 8, 2017)

**브라질 부패 스캔들 남미 전역으로 확대 (The Guardian, 2017.2.11)**

- 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서 촉발된 뇌물수수 사건이 파나마부터 페루까지 중남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 브라질 대통령의 퇴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규모 뇌물 관련 스캔들의 여파가 중남미 전체로 번지면서 파나마부터 페루까지 여러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브라질의 최대 건설사 오데브레히트의 비밀조직 ‘뇌물부’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정부 관료들을 어떻게 매수했는지가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만 미화 8억 달러(6억 4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이 어떻게 정교한 계획 하에 정치인과 정당에게 흘러들어갔는지가 목격자, 유죄 협상, 누출 및 압수된 문서 등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 검찰이 문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남미 지역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미첼 테메르(Michel Temer) 브라질 대통령의 지난해 증언이 유출되면서 오데브레히트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은 문제의 뇌물 스캔들과 관련하여 체포된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두 대통령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아르헨티나의 연방법원 판사는 아르헨티나 정보기관장이 오데브레히트로부터 6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브라질과 스위스에 관련정보를 요청한 상태이다. 문제의 아르헨티나 정보기관장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은 뇌물수수가 발생한 나라에서 청렴성으로 유명했던 정치인 두 명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이번 주 밝혀낸 것이다. 페루에서는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 전 대통령에 대하여 20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터폴 수배 명령을 요청하였고, 콜롬비아 부장검사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명 모두 역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툴레도 전 페루 대통령은 전임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를 주도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그 이후 부패와 인권침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페루 국민들은 툴레도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큰 충격에 빠졌다. 페루 엘 꼬메르시오(El Comercio)지는 ‘Ama Sua: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옛 안데스의 계명을 제목으로 한 기사에서 안데스 원주민 가문 출신의 툴레도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 페루 당국에서는 툴레도 전 대통령에 3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툴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과 태평양에 인접한 페루 서부 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도로공사 계약을 오데브레히트에 유리하게 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페루 당국은 스탠포드 대학교에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툴레도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하여 미국과 이스라엘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툴레도 전 대통령의 부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며 이스라엘은 페루와 범죄자 인도조약이 체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페루 당국에서는 툴레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도피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 콜롬비아의 네스토르 마르티네스(Nestor Martinez) 부장검사는 오데브레히트에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수감되어 있으며 와중에 산토스 대통령의 반대파와도 연관되어 있는 전 상원의원의 증언에 근거하여 산토스 대통령을 1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마르티네스 부장검사는 이번 주 브라질을 직접 방문해 기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산토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불거지고 있는 문제의 스캔들에 대해 강력한 우려 입장을 표명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더욱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달 오데브레히트의 뇌물을 받은 누구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오데브레히트가 미국 법무부와의 유죄 협상에서 부정부패 관련 혐의들을 인정한 후 연루된 전 정부 관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해외 파견을 보내기도 했다. 오데브레히트는 사건 종결을 위하여 스위스와 미국, 브라질 당국에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검찰의 유죄 협상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오데브레히트가 사업을 영위했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뇌물수수가 아주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 미국 법무부 부차관보는 ‘세 개의 대륙 많은 국가들의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게 수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오데브레히트는 말하자면 ‘뇌물부’라고 할 수 있는 정교한 비밀조직을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 지역 언론에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름붙인 증언이 오데브레히트의 전 고위임원들에게서 확보되면 뇌물공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고 누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세부정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데브레히트의 고위임원 및 창업주의 손자인 마르셀로 오데브레히트(Marcelo Odebrecht) 전 사장 등 77명의 유죄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증언이 대중에 공개된 바는 없지만, 막대한 파괴력을 가진 증언 내용이 영원히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유출된 단 하나의 증언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테메르 대통령이 오데브레히트 그룹으로부터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선거운동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테메르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오데브레히트 그룹의 부패 스캔들로 정치생명이 위기에 처한 역대 두 번째 브라질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전 브라질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가 아닌 예산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탄핵되었는데, 탄핵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카 워시’ 스캔들에는 오데브레히트 그룹의 부패가 연루되어 있다.
- 파나마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고발한 라몬 폰세카(Ramon Fonseca)가 오데브레히트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로펌의 창업주 중 한 명이자 대통령의 전 측근인 라몬 폰세카 자신도 바렐라 대통령이 오데브레히트 그룹에서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직후 오데브레히트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받기 위하여 동업자 유르겐 모색(Juergen Mossack)과 함께 체포되었다.

- 폰세카는 '발레라 대통령은 모두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데브레히트 그룹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내게 말했다'라고 했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발레라 대통령은 오데브레히트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선거에 사용된 모든 자금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 원문기사 : Brazil's corruption scandal spreads across South America (The Guardian, Feb. 11, 2017)

**프랑스 대선 휩쓰는 후보들의 부패 혐의 (The Guardian, 2017.2.24)**

- 부패스캔들이 제기된 프랑스 대선후보 프랑소와 필롱(Francois Fillon)의 파리 지역구 내 봄비는 상점가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정치권 부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 52세의 약사는 한숨을 쉬며 ‘프랑스의 모든 정치인은 부패했다. 밝혀지는 스캔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정치인들은 모두 나쁜 짓만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 프랑스 대선이 부패 혐의와 조사로 얼룩지고 있다. 경찰의 기습 수사가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프랑스 정치의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이 증대되고 있다.
- 가장 처음으로 ‘부패 제로 청렴 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쳤던 필롱 후보가 가짜로 추정되는 15년 임기의 의회 보좌역 직무에 대하여 그의 영국인 아내 페넬로페에게 적어도 68만 유로의 급여를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이후 검찰 금융경제부에서는 필롱 후보가 자식들에게 역시 고액연봉의 가짜 직무를 부여하고 국고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도 확대했다.
- 다음으로는 5월에 있을 본선거에 진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 역시 자신의 정당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30만유로 이상의 유럽 연합의회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 르펜 후보는 대선 후 6월에 있을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를 위한 소환명령에 불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전선 본부는 이번 주 경찰의 기습 수사를 받았으며, 르펜의 최측근 중 경호원과 개인 비서 두 명이 조사를 받았다.
- 필롱과 르펜의 부패 스캔들이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필롱은 큰 타격을 받은 반면 르펜의 지지율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 필롱과 르펜 모두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전임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 관련 조사를 받을 때 활용했던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적이 꾸민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 필롱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야유를 받고 선거운동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롱 후보는 기소 여부와 관계 없이 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 르펜 후보는 중도 무소속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후보 및 필롱 후보에 비해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르펜 후보가 2차 투표에서는 질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후보 지지자들보다 탄탄하고 충성도 높은 지지자들이 르펜 후보를 위하여 결집해왔다.
- 프랑스 국민전선은 지난해 세 가지의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 앞서 말했던 유럽연합의회 공금 유용, 국내 선거 공보물 제작비용 과다청구 등 부정 선거자금조달 관련 조사, 그리고 마린 르펜 후보와 그 부친 장 마리가 유럽의회의원 자격으로 제출한 이해관계 신고서에서 개인자산의 규모를 축소 기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이다.
- 마린 르펜 국민전선 당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다. 지지율에 아무런 변화 없이 모든 혐의를 빠져나가면서 마리 르펜은 ‘테프론 후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 정치역사학자이자 프랑스 대선 선거운동에 관한 책 ‘엘리제 서커스’의 저자인 장 가리그(Jean Garrigues)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이번 대선에 대한 반응은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르펜의 지지율에 어떠한 타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가리그는 또한 ‘르펜이 타격을 입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르펜이 받고 있는 혐의의 본질이다. 유럽의회 건은 당 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이지 르펜 본인의 개인적 축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 가리그는 또한 ‘국민전선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자기 방어와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르펜에 대해서는 매우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이는 그런 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르펜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지난 주말, 파리를 포함하여 프랑스 전역의 도시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부패는 감옥으로’, ‘부패 특권 철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 와중에 프랑스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프랑스 국민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 지난 수십 년 간 프랑스에서는 부패에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정치인생을 이어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인데,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후 결국 2011년 자신의 우파 정당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고를 유용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프랑스에서는 현재 부패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 및 중앙 의회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하곤 하는데, 전 녹색당 대선후보이자 반부패 판사를 지냈던 에바 졸리(Eva Joly)는 이러한 현상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위험한 문화라고 지적한다.
- 프랑소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대규모의 정치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마침내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고, 프랑스에 부패에 대한 새로운 수사권 및 분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세 제도 정의를 위한 올랑드 전 대통령의 드라이브를 이끌었던 제롬 카후작(Jerome Cahuzac) 전 장관이 조세 포탈 및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 가리그는 과거 프랑스에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냉소와 포기’가 지배적이었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더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적 위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의 위기 상황 때문에 10년 전에는 용인될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프랑스의 2017년 대선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아직도 부동층으로 남아있다. 필롱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완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핵심 우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르펜 지지자들이 가장 확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도 중진 프랑소와 베이루(Francois Bayrou)의 지지선언을 받은 마크롱 후보는 프랑스 정치개혁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필롱의 선거구 주민인 77세의 은퇴한 마트 점원 아닉(Annick)씨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믿었던 필롱 후보에 대해 카톨릭 신자인 가족들 모두 너무나 실망을 했으나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필롱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닉 씨는 또한 정말로 두려운 상황은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마린 르펜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기사 : 'Teflon' Le Pen unshaken as corruption plagues French election (The Guardian, Feb. 24, 2017)

**‘9억 명 이상의 아시아인 지난 해 뇌물 상납 압력 받아’ (The Japantimes, 2017.3.7)**

- 지난 화요일, 국제투명성기구는 아시아인의 4분의 1 이상이 지난 해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뇌물을 상납해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 정부들에게 만연한 뇌물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번 보고서를 위하여 파키스탄 부터 호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 16개국 2만명 이상의 아시아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 조사 결과 지난 12개월 동안 9억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차값’을 건네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뇌물 상납 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인도와 베트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두 국가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 공교육이나 공공의료 등 기초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뇌물을 건네야 했다고 응답했다.
- 많은 국가에서 실제 부정부패율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이 높은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뇌물 상납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부패 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 조사 결과 중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16개국 전체 22,000명의 설문 응답자들 중에서 중국인의 73%는 지난 3년간 자국의 부정부패 정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 최근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수개월동안 시위를 벌이게 한 권력 남용 스캔들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한국에서는 50%의 응답자들이 최근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응답자의 2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순위에서 가장 하위권에 위치한 나라는 태국으로 14%의 응답자가 최근 자국의 부정부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다.
- 조사 결과 가장 빈번하게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경찰관으로, 지난 해 경찰과 대면한 사람들 중 3분의 1이 실제 뇌물을 건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층이 뇌물 상납 압박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빈곤층 응답자의

- 38%가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뇌물을 건네야 했다고 응답했는데, 여러 소득계층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다.
- 태국과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는 빈곤층이 뇌물 요구의 가장 큰 표적이 된 반면,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는 그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 국제투명성기구의 호세 우가즈(Jose Ugaz)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각국 정부들이 반부패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가즈 의장은 ‘뇌물수수는 사소한 범죄가 아니다.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고,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이 인식한 부패수준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들은 자국에서 뇌물이 만연하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지난 해 아시아 지역 내 많은 국가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면서 연일 대서특필 되었고, 대규모 시위가 촉발되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5년부터 이어진 뇌물수수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집 라자크(Najib Razak) 총리와 그 측근들이 정부개발펀드 1MDB를 통하여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국제적인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 지난해 한 부정부패 감시단체에서 발행한 보고서는 또한 캄보디아 훈 센(Hun Sen) 총리의 가족 및 측근의 대규모 부정축재를 자세히 고발했다.
  - 중국에서는 최근에 반부패 정책이 엄격하게 실행되면서 백만 명 이상의 정부 관료가 적발되었다. 또한 또 다른 공산국가 베트남에서는 비대한 공공부문에 뇌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인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태국 군사정부 역시 비슷한 반부패 캠페인 실행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 원문기사: More than 900 million in Asia forced to pay bribes in last year, Transparency International says (The Japantimes, Mar. 7, 2017)



러시아 반부패 시위에 수천 명 참여 (Financial Times, 2017.3.27)

- 지난 일요일, 수만 명에 이르는 반부패 시위대가 러시아 내 수십 개 도시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최근 수년 간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 경찰 체포 건들을 감시하는 단체인 OVD-Info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중심가인 트베르스카야가에서 시위를 벌인 7,000명 중 933명이 모스크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반부패 활동가이자 대선출마를 시도하고 있는 시위 주최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 시위 주최측에서는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극동의 블라디보스톡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2~3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금지령을 어기고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 이제 1년여 남은 다음 대선에서 푸틴의 연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측보다 많은 수의 러시아 국민들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러시아 대중의 분노가 이전에 생각되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크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지 드러났다.
- 공식적인 봉급만으로는 절대로 구입할 수 없는, 대궐 같은 부동산을 사 모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를 이 달 초 발표한 후 나발니는 러시아 국민들의 시위 참가를 촉구해 왔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대변인은 이 영화를 '반대파 사기꾼이 만든 저속한 선동'이라고 폄하했다.
- 모스크바 외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기 24시간 전에는 인접국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지난 수년 간 벌어졌던 독재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퇴진 시위 중 가장 규모가 큰 평화시위에 참가했던 600명 이상이 체포되기도 했다.
- 러시아 국영 언론에서는 나발니의 영화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공개 후 몇 주 만에 유튜브에서 1,1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 영화의 성공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다음 대선 출마자격을 박탈당하기는 했지만, 나발니는 여전히 전국의 투표함과 개표 자원봉사자 사무실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 유럽인권법원에서 나발니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방법원은 지난 2월 황급히 나발니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 일요일 시위 역시 국영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고, 2012년 푸틴의 연임 반대시위에서 경찰에 의해 해산된 시위대 숫자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숫자의 시위 참가자가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체포되었다.
- 특히 이번 시위는 2013년 나발니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을 때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비인가 시위 때보다도 더 큰 규모였다.
- 당시 모스크바 시장이었던 세르게이 소바닌(Sergei Sobyenin)은 그 해 시장선거에 적합한 경쟁자를 찾던 중으로, 나발니를 대신해 사법절차에 개입하였고, 검찰에서는 바로 다음날 황급히 나발니의 집행유예를 신청하였다.
- 득표율 27%로 2위를 기록한 나발니에게 압승을 거둔 후 소바닌 시장은 도로포장 확장사업, 화려한 네온사인과 거대한 조각상 등을 내세운 거리 축제 연중 운영 등을 포함하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젊은 진보성향 모스크바 유권자에게 어필하려고 애썼다.
- 역설적으로, 더 넓게 포장된 도로는 더 큰 규모의 시위대가 거리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했다. 이전에는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푸틴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민들이 더 넓어진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모두를 체포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외친 것이다. 나발니의 영화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애완오리에게 호화로운 집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고, 그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고무오리를 들고 나왔다.
- 나발니는 구치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내가 알기로, 그것은 도둑놈들이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이다. 부패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수백만 명이나 되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 러시아의 초창기 반정부 시위는 5년 전 경찰의 대규모 단속 이후 잠잠해졌는데, 그 와중에도 러시아 전역 80개 이상의 시도지역의 모스크바 중산층으로 확대되었다.
-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5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러시아 남부지역의 크라스노다르에서는 2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태평양 연안의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
- 심지어는 코카서스 북부의 지하디스트 공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자 대선 때에는 언제나 푸틴 지지율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마카치칼라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시위 주최측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도 156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 원문기사 : Russians take to streets in thousands to oppose corruption (Financial times, Mar. 27, 2017)

## 2 국제회의 동향

### 1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1. 24.(화) ~ 1. 26.(목), 독일 베를린
- 주관기관 : G20 반부패 실무그룹 공동의장국(독일, 브라질)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B20/C20 등

※ 우리 측 대표로는 부패방지국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참석

#### □ 주요 결과

- 의장국인 독일이 제안한 '법인책임', '반부패 조직화',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척결' 등 3가지 고위급 원칙안을 향후 7월 정상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간 지속적 협의를 하기로 함
- 공동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기술지원 질의서'는 대부분 회원국이 찬성하였으나, 질의항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어 다음번 회의 때 질의항목을 채택하고, 향후 기술지원 고위급 원칙안도 마련될 예정
- '15-'16년 행동계획 일환인 공공정보 우수사례 자료집은 일부 회원국의 업데이트 요청이 있었으며, 관세분야 부패척결 고위급 원칙안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 의견수렴 후 silence procedure를 통해 회원국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
- 또한, 예산분야 투명성 Toolkit은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나, 그에 수반한 '핵심 메시지' 형식의 국가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은 추후 회원국의 의견수렴 예정

## ②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7. 2. 18.(토) ~ 2. 20.(월), 베트남 나트랑
- 참석자 : 16개 APEC 회원, TI, UNODC 등 국제기구 대표 60여명  
 ※ 우리 측은 행동강령과장,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참석

### □ 주요 결과

#### ① 제24차 ACTWG 회의

- ACTWG 2013-2017 중장기 전략계획안 채택 관련, 회원국에게 먼저 계획안을 회람한 후 8월 회의에서 계획안을 최종 채택기로 함
- 각국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에서는 11개(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칠레, 필리핀, 대만, 페루, 인도네시아) 회원기관이 자국 내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입법 및 이니셔티브 발표
  - 우리 측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 사항, 청탁금지법 제정·시행 등 반부패 입법활동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수출, 외국인 청렴과정 운영 등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현황 등을 발표
- APEC 2017 우선순위, 2017 ACT 작업 계획은 이견 없이 채택

#### ②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촉진 워크숍

- 시민 참여촉진을 통한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국가, 언론 및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
  - ① 참여 촉진을 통한 청렴문화 구축과 국가의 역할 ② 민간 분야에서의 부패 척결 노력 ③ 반부패 분야에서의 사회조직과 사민의 역할
- 위원회 대표단은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소개하여 한국 정부의 시민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근절 노력 소개

### 3 옴부즈만 소식

#### □ 영국: 마이클 킹 신임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장 취임

※ 출처: UK 'Michael King begins term as new Local Government Ombudsman' (ICI 홈페이지 News, 1201.2017)

- 소비자보호 및 공공안전 분야에 2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킹 (Michael King)이 오늘(1월 11일) 영국 지방정부 옴부즈만(Local Government Ombudsman, LGO)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 2016년 11월 1일 의회 청문회 이후 지자체 및 지방정부 선임 위원회에서 킹을 인준했다. 킹은 2004년 이래로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일해 왔으며, 가장 최근의 직책은 최고책임자였다. 킹은 또한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회의 서비스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인 '잉글랜드 지방행정 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 킹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옴부즈만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옴부즈만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중대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 '옴부즈만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 '지방정부 옴부즈만 위원회의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기타 위원회, 의료기관과 더 긴밀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접수되는 국민들의 민원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 호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출생·사망·혼인 신고제도의 결함 드러나

※ 출처: Australia 'Tragic case highlights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failings'  
(IOI 홈페이지>News, 30.01.2017)

- 사망한 아이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던 한 여성에 대한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출생·사망·혼인신고 제도 개선의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여성의 미숙아 쌍둥이 남아 중 하나가 출생 4년 반 만에 사망했는데, 그 후 12개월간 이 여성은 쌍둥이 아들에 대한 정확한 출생 증명서와 사망한 아이에 대한 수정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20차례 이상 등록소를 찾아가야만 했다.
- 이미 많은 가족관계등록소 관련 민원이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 또한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옴부즈만에서는 2016년 8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서로 다른 내용의 안내를 받았고, 민원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동일한 요청을 반복하면서 이미 제출한 정보를 또 제출해야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빅토리아주 데보라 글래스(Deborah Glass) 옴부즈만은 문제의 민원과 관련하여 출생·사망·혼인신고 민원 처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의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불확실성과 시민의 고통, 슬픔이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글래스 위원장이 지적한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부실한 기록관리 및 행정 관행
- ▶ 분명한 정책의 부재
- ▶ 인력 부족
- ▶ 지나치게 긴 통화 대기 시간
- ▶ 시민 요청 처리 및 후속조치 지연
- ▶ 부실한 민원 처리

- 글래스 위원장은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 담당 업무 대부분의 민감한 특성을 생각했을 때, 등록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쌍둥이

어머니가 겪어야만 했던 경험이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니다. 옴부즈만에 접수되는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 관련 및 출생증명서 발급, 민원 처리 지연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에서는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에 향후 18개월 이내 운영 관행 및 실적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을 것과 개별 민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것, 비용을 지불한 민원인의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 클래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의 권고 및 피드백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법무부에서는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의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인력 충원 및 최신 기술 도입, 민원처리 절차 도입 등을 통하여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기술된 추가 권고사항들을 이행한다면 출생·사망·혼인신고 등록소의 민원 처리 수준이 모든 빅토리아 시민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 스페인: 2016년 옴부즈만 활동 평가

※ 출처: Spain '2016 Evaluation - a year's activity by the Office of the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31.01.2017)

- 2016년 스페인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평균 응대시간을 단축하였고 옴부즈만 업무 투명성 및 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최적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2013년 옴부즈만에서 답변을 받는 데 62일이 소요됐던 반면, 현재는 평균 27.99일이 소요되고 있다.
- 관련 공약 및 권고사항
  - 스페인 옴부즈만에서는 또한 국민을 위한 제도 재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각급 정부기관에 대한 1,700여개의 개선안을 내놓았으며, 870개의 자체 계획안 이행도 착수하였다. 스페인 옴부즈만에서 2016년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 **난민**

- 스페인 내 난민신청자들의 수용과 통합 제도 개선을 위하여 2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관료주의와 서로 다른 기준, 절차, 마감일 때문에 난민신청이 신청자 및 관료들에게 미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동 난민신청 정책을 촉구하였다. 10월에는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정부당국간 협력 확대 및 스페인 내 난민 수용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12월에는 스페인 옴부즈만의 솔레다드 베세릴(Soledad Becerril) 위원장이 그리스의 테르모필레와 엘로네아스에 위치한 난민캠프를 방문하였다.

### **가정폭력**

-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리스크 발견과 보호조치 개선을 위하여 정부 당국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옴부즈만에 경찰업무 평가지표 업데이트를 요청한 후, 스페인 경찰청은 가정폭력 리스크 및 피해자 안전 관리에 대한 경찰 평가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다.

### **담보대출자 보호**

- 2016년 12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은행들이 담보대출 이율 하한선을 적용하여 거둬들이는 모든 이자비용을 대출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스페인 옴부즈만에서는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별도의 제도 신설을 제안하여 문제의 이자를 지불한 대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옴부즈만에서는 또한 비윤리적인 채권추심방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수금 채권추심 서비스에 대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 **현금자동지급기 수수료**

- 스페인 옴부즈만은 타행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출금할 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옴부즈만에서는 최대 수수료를 적용과 소비자가 어떤 현금지급기를 이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

- 스페인 옴부즈만에서는 14개의 시의회에 대기오염 해결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대한 단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발레아레스제도 지방정부에게 지난 8월 통과된 환경평가법의 시행 이후 자연지역에 대한 환경보호의 축소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세세나(Sesena) 지역 페타이어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상세정보를 해당 지방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 **은퇴 문화예술인 연금 수급**

- 예술가와 창작자로 구성된 ‘세귀르 크레안도(Seguir Creando’, 지속 창작) 플랫폼’에서 많은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스페인 옴부즈만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옴부즈만에서는 스페인 정부에 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 실행을 권고하였다.

## **암환자**

- 아동 암환자 치료에 있어서 잠재적 문제점 확인 등을 포함한 암환자 권리 보호 및 스페인의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최신 항암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 치료 적합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도록 하고 병원에 관련 인력이 없는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취해졌다.

## **장애학생 보호**

- 전반발달장애 학생이 교육받는 일반 특수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학급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스페인 중앙 교육·직업훈련·대학교육부(Department of State for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Universities)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스페인 국립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 입학에 장애학생 할당인원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다.

## **인신매매**

- 인신매매 대응에 있어서 중앙 보안군과 지역 보안군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이들의 영주권 및 취업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 **해외 재소 스페인 국민**

- 옴부즈만에서는 해외 교도소에 수감된 스페인 국민들이 특히 의료 서비스 및 본인 사건 관련 법적 절차와 수감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방문과 도움을 영사관 업무의 일부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옴부즈만에서는 또한 해외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스페인인 재소자의 신속한 본국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관련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국가고문예방기구(National Mechanism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NMP)로서 활동**

- 옴부즈만은 국가고문예방기구로서, 2016년 구치소에 100번 이상 방문하여 10개의 권고안, 319개의 제안사항, 3개의 법적 의무 이행 독촉을 내놓았다. 131개의 직권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인력이 마드리드에서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의 범죄자 본국송환 비행 (FRONTEX flight) 두 건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 케냐: 옴부즈만 개입으로 병원 계약직 400명 정규직 전환

※ 출처: Kenya 'Commission's intervention secures permanent employment for 400 hospital staff' (IOI 홈페이지>News, 17.02.2017)

- 케냐 모이(Moi) 3차 대학 부속병원 직원 일부가 불공정한 고용 관행에 대하여 케냐행정정의위원회(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빨리 좋은 소식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엘도레에 위치한 모이 대학 부속병원의 계약직원 400여명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이 계약 직원들은 12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 하에 2010년 모이 3차 대학 부속 병원(Moi Teaching and Referral Hospital, MTRH)에 고용되었다. 이들은 또한 민원에서, 병원 측에서 정규직 공백이 생길 때마다 경험과 능력이 축적된 자신들을 우선 채용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 그러나 병원 경영진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혈연, 연고, 편파적 평가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채용을 실시하였다. 400명의 계약직원들은 병원의 채용 절차가 채용공고에 기술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면접 역시 소수의 부서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케냐 행정정의위원회의 엘도레 사무소에서는 2015년 10월, MTRH 병원장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고, 2015년 12월 21일자로 어렵게 첫 회신을 받았다.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몇 차례 더 서신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위원회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2일자로 결의안을 발행하여 민원인들의 고용 형태를 연금 수급권을 가진 정규직으로 확정하고 MTRH 병원의 인사정책 및 매뉴얼을 점검하여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병원 이사회에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민원인들의 기한부 고용계약을 영구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국고 지원금 배정을 요청하였다. 이후 병원장은 2016년 6월 28일자로 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민원을 제기한 계약직원들이 연금 수급권을 가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인사 매뉴얼을 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의 이러한 조치들은 민원인들의 2016년 12월 23일자 서신을 통해 확인되었다.

□ 영국: 무료통학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곤란을 겪는 아동 증가

※ 출처: UK 'School transport policy changes causing upheaval for increasing numbers of children'  
(IOI 홈페이지>News, 20.03.2017)

- 영국 지방정부 옴부즈만(Local Government Ombudsman, LGO)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교통 정책 변화가 어린이들의 통학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의회 교통 정책 혹은 그 적용방법의 변경 때문에 아이들의 통학을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가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LGO의 수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 2015~2016년 LGO에는 통학 교통과 관련하여 2014년 16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261건의 민원 및 질의가 접수되었다.
- 접수된 민원 중 한 건은 자폐증이 있는 10대 학생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방의회에서 교통정책을 개정할 경우 학생이 택시 통학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가족은 교통정책이 개정될 경우 자폐증이 있는 이 학생이 가로등도 없고 보행로도 없는 1.6km를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그 후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남학생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큰 소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통학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또 다른 경우에는, 막내딸이 언니들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무료 통학 서비스 제공을 지방위원회에서 거부당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였다. 상소심사위원회에 민원인 가족의 상황과 경제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는 무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O의 조사 결과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재량권을 적용하여 무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검토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 마이클 킹 LGO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학생들의 무료 통학 서비스 신청 승인 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재정적 곤란이 학생 가정에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취약계층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방의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상황은 나도 잘 알지만 의사결정 과정 전체 그리고 의사 결정 근거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 LGO의 보고서는 무료 통학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학부모와 지방의회 양측을 위한 조언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정책이 개방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절차 검토 방법을 의원들에게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 아일랜드 옴부즈만과 의료협회 간 협력으로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 출처: Ireland 'Ombudsman and Medical Council agreement will benefit the public and health services' (IOI 홈페이지>News, 27.03.2017)

- 2017년 3월 23일 아일랜드 의료협회와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양자 간 정보 및 민원현황 교류를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양해각서를 통하여 일반 시민이 양 기관의 서비스를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될 것이다.
-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 적합한 경우에 대하여 의료협회에서 옴부즈만으로 민원 직접 이관
  - ▶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 의료 관련 민원을 옴부즈만에서 의료협회로 이관
  - ▶ 환자 진료 수준과 안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및 연구 등 공동 과제 수행
- 양 기관 간 모든 정보 교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피터 틴달(Peter Tyndall)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MOU 체결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건의료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얘기한다.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잘못된 창구는 없다는 원칙하에 옴부즈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와 민원을 다루는 기관의 책임은 국민에게서 받은 민원과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우리 옴부즈만과 보건정보품질관리청(HIQA, Health Information and Quality Authority), 아동옴부즈만 사이에 여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철저하며 신속하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아일랜드 의료협회의 빌 프라시프카(Bill Prasifka) 대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우리 의료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의료인을 관리할 법적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옴부즈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될 것이다. 우리 양 기관은 각자의 법적 소관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협회와 옴부즈만 사이의 협력이 중요한데, 각각에 접수된 민원들을 그것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이관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하여 민원의 적시 해결을 위한 최적의 기관에 정확하게 민원 해결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 4 참고자료

### 1.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아시아부패지수

※ 출처 : Asian Intelligence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Asia, the US and Australia" 한국 부분

- 급격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부정부패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올해 점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25%만이 부정부패 관련 문제들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5%는 악화되었다, 40%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 권익위는 올 한 해 부패 척결과 대중 의식 및 국제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공무원, 교사, 기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대를 근절하기 위한 엄격한 새 법의 시행과 발맞추어 권익위에서는 기업부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대중의 반부패 의식 개선을 위하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부패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권익위가 부패 척결과 인식 개선에 있어 성취해 왔던 모든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 최순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인해 빛이 바래게 됐다. 2016년 10월 이래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연일 대서특필 되면서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층 사이에 아직도 뇌물수수가 횡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남겼음에 틀림없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해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부패인식조사에서 유일하게 놀라운 점이 있다면 그 결과가 현 상황보다 더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의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많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지난해 발생한 사건들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벌에 대한 진정한 개혁 요구가 너무 거세져서 차기 대통령이 이와 관련하여 무언가 확실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의 초기 행보는 지배구조 간소화, 이사회 독립성 확대, 소액주주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재벌 경영의 개선을 위한 개혁법안 국회통과에 집중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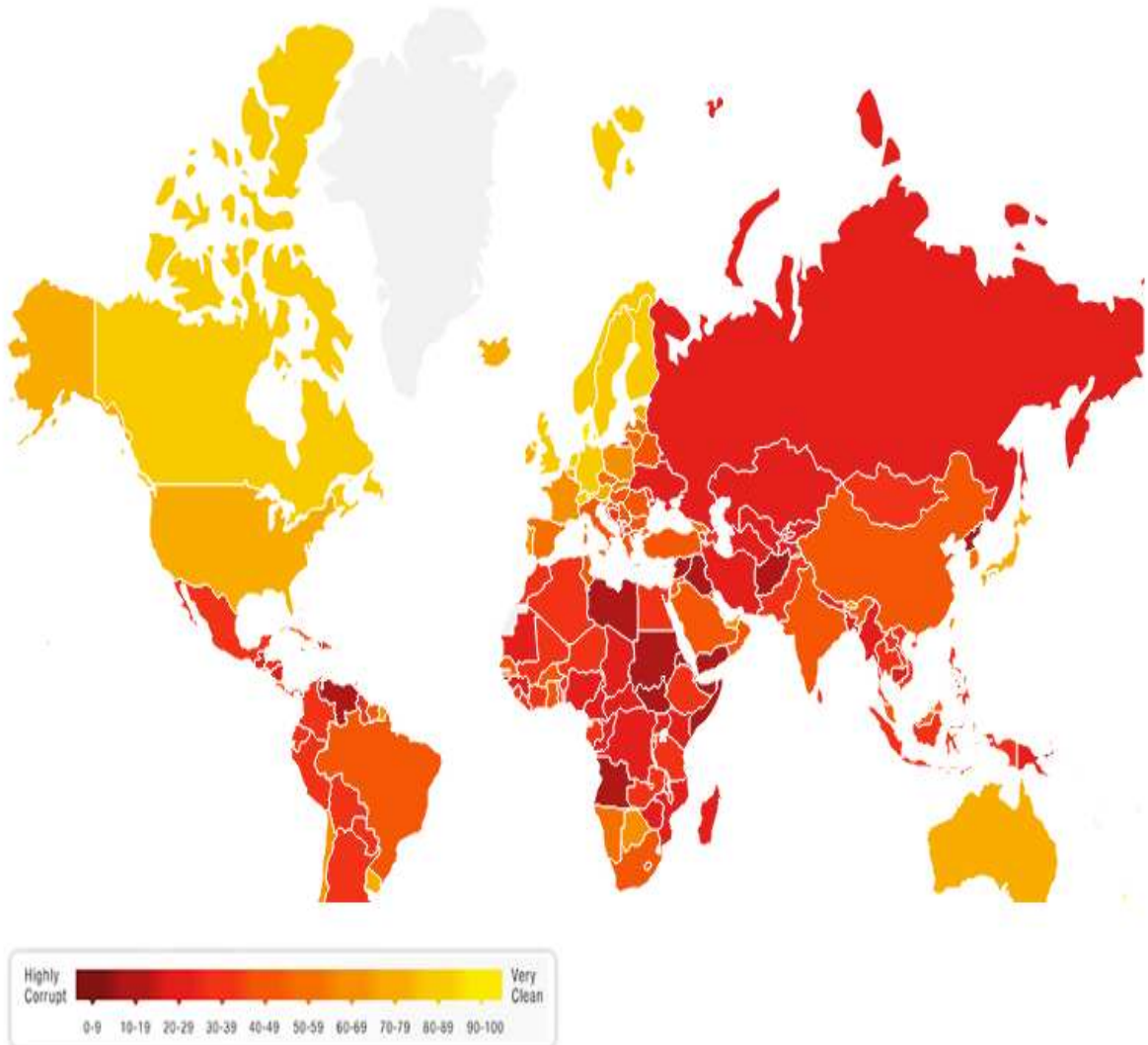
- 삼성그룹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자산 해외 은닉, 수익 은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본인의 연루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특검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이부회장을 특별 사면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특별사면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한 풀 꺾이고 난 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 과거에도 재벌에 대한 수많은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최순실 사건을 통하여 한국의 구시대적 기업경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 고위정치인과 재벌총수들은 그러한 관행을 구태여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고, 어떻게 홍보를 잘 해서 국민의 반발 없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쉽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정권을 잡을 확률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최고위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하급 정부부문의 부정부패 축소에 성과가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인 만큼, 일단은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다. 그 후 차기 정부는 강력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다. 차기 대통령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 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측근정치와 정경유착 척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의 증표이다. 그러나 탄핵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심지어는 작지도 않고 너무나 큰 규모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상 한국 근현대사의 모든 대통령이 ‘청렴’을 표방했지만 결국에는 부패 스캔들의 대상이 되었고 스캔들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을 사면해 주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한국 재벌총수들이 회사의 위상 확대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뇌물을 건네 왔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기업 총수들은 역사적으로 거의 항상 특별사면을 받아왔고,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검찰과 법원에서 법에 따라 구형과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특별사면은 그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돈 봉투 혹은 다른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이다. 정부에서는 용인되는 수준과 그렇지 않은 수준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정의하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 한국 정치에서 부패 사건이 터졌을 때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관련 정당명 뿐, 실제 연루된 정치인들과 정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기업과 결탁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인 것이다.

## 2. 2016년 부패인식지수

※ 출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6'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국가는 없었다.
- 올해 부패인식조사에 포함된 176개 국가 및 지역의 3분의 2 이상이 0점(심각한 부패)에서 100점(매우 청렴) 기준으로 50점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은 고작 43점으로, 공공부문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확인해 주었다. 가장 높은 청렴 점수를 받은 국가들(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보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패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가(지도에 주황색 및 빨간색 표시)의 숫자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 특히 올해의 결과는 서로를 강화하면서 부패 및 불평등한 권력과 부의 분배라는 악순환을 탄생시키는 부패와 불평등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부패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밤마다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드는 반면 부패한 권력층은 태연히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호세 우가즈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말했다.
- 부패와 불평등의 악순환은 또한 포퓰리즘을 심화시킨다. 기존 정치에서 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냉소적이 되고, 점점 더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호언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를 지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의 해결보다는 애초에 포퓰리즘의 심화를 야기했던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 올해의 조사 결과 많은 국가들이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부패 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잘 보여준다.

### **핵심 요약**

- 부패인식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에서는 경찰이나 사법부 등의 공공기관의 운영이 신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부패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국민들은 빈번히 실제 뇌물을 건네야 하거나 그러한 압박을 받고, 공공 자금 횡령으로 망가진 기초 공공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며, 뇌물을 받는 정부 당국에서 보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 이러한 현실에서는 엄청난 부패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오데브레히트가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ich)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일련의 스캔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경유착으로 수십억 달러의 국고가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를 배불릴 수 있도록 하는지가 드러났다. 이러한 식으로 정교하게 계획된 부정부패는 인권을 침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로

막으며, 사회적 배제를 불러온다.

-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언론의 자유, 공공 지출의 투명한 공개, 엄격한 공무원 청렴 기준, 사법체계의 독립 정도가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완전히 안심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부정부패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밀실계약이나 이해관계 충돌, 불법적 자금 조달, 비일관적인 법 적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 정책이 왜곡되고 국·내외 부정부패가 악화될 수 있다.

## **지역별 분석**

- 부패는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래 지역별 분석에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 **미주지역: 때로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 연일 부패스캔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이 항상 나쁘지만은 않다. 4월 발생한 파나마 페이퍼 사건으로부터 12월 브라질 오데브레히트 그룹의 미화 35억 달러에 이르는 합의금 지불 합의에 이르기 까지, 2016년은 미주 지역 부패 척결 노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한해였다.
- 파나마 페이퍼 사건으로 인하여 파나마의 한 로펌이 수천 개의 비밀 유령회사 설립을 도와 전 세계의 부패 정치인과 범죄자, 탈세범이 이용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데브레히트와 미국 법무부의 유죄 합의를 통하여 이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 중남미 전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두 개 국가의 정치인과 정당에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 많은 특권층과 권력자들이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칠레 대통령의 며느리가 부패 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전 대통령은 현재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다.

- 2016년에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기도 했다. 오데브레히트와 페트로브라스, FIFA 사건들과 관련하여 역내 규제기관 및 법집행기관 간, 또한 유럽 및 미국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 온라인으로부터 기존 언론, 대규모 시위에 이르기까지 지난 수년간 미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이루어진 의제는 부패 근절이었다.
-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여 더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한 움직임이 2016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 미주지역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점이었다. 50점 이하의 점수는 정부의 부패근절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 세계 많은 지역에 여전히 부패를 저지르고도 법의 처벌을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장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소수의 용감한 개인들에 의해서만 노력이 이루어지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17점을 받은 베네수엘라는 미주지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해, 수십만 명이 베네수엘라 정부 반대시위에 참여했다. 멕시코에서는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스캔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의 수준이다. 멕시코의 올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대비 5점 하락하였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점수 하락을 기록하였다.

### **필요한 조치**

- 파나마 페이퍼 사건의 결과로 많은 정부관료의 해외 재산 은닉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내내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열린 런던 반부패 정상회의에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가 익명 유령회사의 실소유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약속하였다.

- 국민은 지도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이러한 투명성 제고와 기타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가 정부당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기업 대표들과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지역내 법집행 기관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파나마 페이퍼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듯이, 공익제보자와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가진 언론이 힘을 합했을 때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향후 미주지역 정부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패 근절 노력은 뒷전**

-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들은 2016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태지역 30개 중 19개 국가는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
- 아·태지역 국가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기록한 이유는 방만한 정부 운영, 불충분한 관리감독,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시민사회 등으로, 반부패 노력이 국가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서특필되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 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부정부패 문제들 역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민주주의의 혜택,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좀먹고 있다.

### **상황이 개선된 국가**

- 아프가니스탄의 점수는 전년대비 4점 상승하였다. (100점 만점 중 15점) 여전히 가장 부패한 나라 10위 안에 들기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부패 인식점수는 2013년(100점 만점의 8점)에 비하여 2016년 두 배로 뛰었다.
- 아프가니스탄의 국민통합정부는 국민을 위한 변화를 약속하며 50개 이상의 부패 근절 공약을 내놓았고, 실제로 일부 진전이 있었다. 널리 알려진 대규모 부패 사건에 대하여 반부패 정의 센터에서 첫 재판이 진행되었고, 국가조달법이 제정되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공약 모두에 대하여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의 점수는 2016년에도 상승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이 2016년 3월 들어서면서 민정으로의 복귀와 함께 많은 희망이 나타났다. NLD는 부패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였고 이는 부패 척결 의지를 위한 진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은 라카인 주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인하여 퇴색되기도 하였다. 군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재할 때 군이 국민에 대한 학대를 저질러도 법적 책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미얀마가 이룬 많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28점에 그쳤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 **상황이 악화된 국가**

- 캄보디아의 점수는 21점으로, 2년 연속 가장 부패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활동영역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결과는 아닐 것이다.
- 태국의 점수는 35점으로 하락하면서, 부패인식과 정치적 혼란 사이의 연관관계를 드러내 주었다. 정부의 탄압, 독립적 감시·감독의 부재, 국민권익의 악화로 인하여 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 태국의 새로운 헌법은 부패 근절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력을 강화하고 책임 없는 정부운영을 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민정으로의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불가능했고, 반대 캠페인도 금지되었으며 수십 명이 구금되었다. 태국 군사정부는 또한 국민투표 모니터링도 금지시켰다. 독립적인 감시·감독과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17년에 주목할 국가**

- 중국의 점수는 3점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점 만점의 40점이라는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반부패 노력은 고위공무원이든 하급 공무원이든 부패를 저지른 자는 모두 잡아 들인다는 소위 ‘호랑이와 파리 모두 잡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노력은 투명성 제고와 독립적인 감시·감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부패 척결 노력에는 반드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전체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호주는 3년 연속 상위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최근 벌어진 해외 뇌물수수 스캔들과 독립기구에 대한 위협 때문에 순위 상승에 실패했다. 난민신청자 수용소에서 벌어진 심각한 신체적·성적 폭력 사건의 증거를 제시하는 호주 인권위원회(AHRC)의 보고서 발간 이후, 호주인권위 위원장의 신뢰성과 청렴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있었다. 그러한 위협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인권위 같은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인도는 계속해서 40점 내외의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사소한 부패 사건 및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인도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율과 문맹률, 경찰의 만행에 대한 부정부패의 영향을 보면, 인도의 경제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가장 큰 이목을 끈 사건들은 ‘아직 알 수 없음’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두테르테 대통령이 극적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필리핀에서는 반부패 관련 단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암살단 고용, 언론에 대한 공격,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기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2017년에도 계속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미화 7억 달러 상당의 예금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총리가 연루된 1MBD 부패 스캔들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말레이시아는 100점 만점의 49점이라는 초라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총리의 불충분한 해명, 그리고 그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2017년에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 한국은 2016년 벌어진 부패 스캔들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의 거의 모든 재벌기업이 연루된 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최고위층 부패가 2017년 한국의 화두가 될 것이고, 100점 만점의 53점으로 전년대비 3점 하락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전반적으로 정체 상황**

-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부정부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부패 근절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사실은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 이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부패, 공금 유용, 정치인의 비윤리적 행동 등에 대한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치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강화되었다.
- 올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전년대비 2점 상승했다.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심지어는 대통령의 자산을 공개하는 온라인 공표 시스템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법체계 상의 문제점 때문에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많은 국가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잘못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최근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은 부패와 은고恩顧주의(clientelism)를 합법화함으로써 의사결정권한을 주도하거나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더 큰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 부패 스캔들은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부패 인식지수 점수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덴마크**에서는 지난 해 20명의 국회의원이 (총 179명 중 11%) 자산공개에서 외부 활동과 금융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해, 경찰사무위원회(Police Works Council) 공금의 상당액이 값비싼 만찬과 파티, 호텔 숙박 등에 사용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네덜란드** 위원이 사임하기도 했다.
-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다. 정당, 의회, 행정부, 사법부 등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기관이 조직적으로 부패에 연루되면 대중은 더 이상 이들이 시민의 필요와 문제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 정치에서 청렴성은 부패 근절의 핵심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서부 발칸반도** 지역의 법 집행 상 문제점의 뿌리가 부유한 기업가 혹은 심지어 범죄조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인들이 공적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폐쇄적인 정치 체계라고 지적했다.
- 정치인, 검찰, 과두정치인(Oligarch)가 저지른 부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한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독점이 만연한 정치적 부패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많은 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 후보국(EU accession), 동유럽 국가에서는 하원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기업 소유자임에도, 국민들의 문제제기 없이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과 네트워크,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법적 환경, 경제 전반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법과 공공기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법적 체계로는 충분치 않으며, 반부패 조항의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 정치적 의사결정이 독점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매일 의사 결정과 행정 절차 상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허점을 파악하며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 및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급격한 점수 하락**

- 6년 전 중동 지역을 뒤흔든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노력과 부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아직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동 국가들 중 대부분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반부패 노력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2016년 반부패지수에서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점수 하락을 기록했다. 이들 중 90%는 전년대비 하락한 50점 이하의 점수를 얻었다. UAE와 카타르는 전년대비 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10개국에 포함되는 이라크, 리비아, 수단, 예멘, 시리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이 5개국은 또한 정치적 불안정과 전쟁, 국내 갈등, 테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쟁과 갈등이 정치적 부패를 낳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우수한 국가**

- 튀니지는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점수가 오른 극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튀니지는 지난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인 정보 접근권법 통과와 국가 반부패 전략 채택 등의 적극적인 반부패 조치들을 취해왔다. 또한 반부패기구의 직무수행 권한이 강화되었고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책임 증진을 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었다. 튀니지 국회에서는 법원에서 대규모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법원법(Financial Court Law)을 통과시켰다.
- 그러나 튀니지 역시 반부패 노력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익신고자 보호, 이해관계 충돌, 부정축재 정책 관련법이 여전히 미비하다. 튀니지의 사법제도는 또한 특히 6년 전 혁명 이후로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을 포함하여 부패 관련 미결 사건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미흡한 국가**

- **결프 지역 국가들**에서는 계속적인 왕가의 정치경제 장악, 국민 자유 억압, 활발한 시민사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하락하였다. 이 지역 연립정부에 군 개입으로 인하여 공공 지출과 국가 예산이 공개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공개되고 있다.
- **카타르**는 올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전년대비 10점이 하락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카타르는 특히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 투표 관련 부패와 이주노동자 인권 탄압 등에 연루되었다.
- **요르단** 역시 새로운 선거법과 청렴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50점 밑으로 점수가 하락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를 부패인식지수에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많은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기소가 이루어진 건은 하나도 없다. 기타 여러 보고서에서도 요르단 정부에서 뇌물이나 정실인사 형태의 사소한 부정부패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요르단에 대한 투자가 가로막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부패척결을 위한 진정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로 인하여 **이집트**의 부정 부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 이집트의 알 시시(Al Sisi)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이집트에서 부정부패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대중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히삼 제네이나(Hisham Geneina) 감사원장을 파면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

## **과제와 해결책**

- 아랍 국가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정치를 가능케 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부정부패에 종식을 고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반부패 활동가, 공익제보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부패가 짓값을 치르게 하고 횡령된 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사법부 및 감사기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진지하고 강력한 의지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다.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 **: 부정부패가 2016년 아프리카 지역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

- 2016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선거는 이 지역 부패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점수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던 가나에서는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투표 결과로 표출되었다. 점수 변동이 없었던 남아공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야히야 자메(Yahya Jammeh) 대통령이 집권했던 감비아 모두 점수 하락을 기록하였고,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부정부패 때문에 선거민주주의의 실현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우수한 국가**

- 아프리카 국가들 중 카보베르데와 상투메 프린시페가 2016년 반부패 지수에서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하였다. 양국 모두 2016년 민주주의 대선을 치렀다. 독립 선거 감시팀에서는 카보베르데의 2016년 대선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 아프리카 가버넌스 관련 보고서에서 평가했듯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청렴 관련 제도의 기틀 위에서 치러진 카보베르데의 2016년 대선에서는 조지 카를로스 폰세카(Jorge Carlos Fonseca)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였다.
- 상투메 프린시페에서는 2016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 **미흡한 국가**

- 아프리카 지역 내 안정적 국가의 모범인 가나를 비롯하여 다른 6개의 아프리카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하락하였다. 가나에 만연한 부패 문제는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를 통하여 분노를 표출하게 하였고, 가나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었다.
-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케냐 등 국토 면적이 넓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올리는 데 실패하였다. 남아공의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로 법원에 출두하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다. 툴리 마돈셀라(Thuli Madonsela) 검사가 발표한 수사결과 보고서에 주마 대통령이 은칸들라 자택에 불법적으로 공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항소를 신청했다.

- 정보권 관련법 통과 등 반부패 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역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후루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반부패 노력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2017년 케냐에서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후루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들을 도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소말리아였다. 소말리아 국회의원 선거는 위법행위와 부정행위로 얼룩졌고, 대통령 선거는 3번이나 연기되어 아직까지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 **향후 필요한 조치**

- ‘반부패 공약’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깨끗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약속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거버넌스 원칙,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공약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운영을 보장하는 제도 강화, 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임기 부여 혹은 새 지도자 선출이라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선거제도의 확립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